

신당 '호남 물갈이론' 논란 확산

'호남 물갈이'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내 여론이 팽배해지자 신당 호남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근 신당 지도부에서 '호남 물갈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이 이를 뒷받침해주자 호남의원들이 '마녀사냥식 물갈이론'이라며 반발하며 나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28일 국회 신당 원내대표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물갈이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홍 의원은 "물갈이라는 어휘에 문제가 있다.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져 들을 수가 없다"며 "사람을 버리지 취급하는 거나 뭐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날 강기정 의원은 "호남의원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우선 명확한 공천원칙이

호남의원들 "지도부도 책임...마녀사냥식 안돼" 손학규 대표 "호남에서 쇠신·변화 모범 보여야"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열 의원은 "호남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물갈이론을 거론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며 매우 부적절하다"며 "마녀 호남의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며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오도되는 듯한 느낌이다. 지도부가 의중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호남 물갈이론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의원은 "지도부라고 해서 공천 프리미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다른 의원은 "정 최고위원도 대선패배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다. 정 최고위원부터 책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손학규 대표는 '호남 물갈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29일에도 계속했다. 손 대표는 이날 YTN '클로즈업' 프로그램에 출연.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쇠신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면서 쇠신과 변화의 모습을 호남에서부터 보여주는 국민적인 뜻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같이 치우거나 내쫓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지만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쇠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호남 물갈이에 신

경을 쓰는 것은 호남지역 공천이 당 쇠신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상징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호남에서 공천 혁명이 수도권으로 이어질 때만이 4월 총선에서의 선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여기에는 호남의원들 대부분이 정치적 역량이나 정책적 능력, 지역구 인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 '호남물갈이'의 명분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호남에서 '누가 탈락할 것인가'보다는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신경을 쓸 정도로 호남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 초선그룹인 '민생제일 쇠신모임' 소속 문병호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호남물갈이론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국민공천심사위를 구성해 인적쇄신, 공천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 공심위원장 박재승씨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4·9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에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9)을 임명했다.

신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강진 출신으로 광주,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제주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지방법원 사회인권지원장,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 임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전봇대'는 아직 도처에



이종태
경제부 부장

지난주는 뜬금없이 '전봇대'가 전국을 들쭉날쭉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탁상행정 사례로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지적하자, 중앙과 지방의 모든 언론이 벌집을 쐬시듯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틀만에 전봇대들은 뿔뿔히 찢어졌다. 파장은 적지 않았다. 이후에도 네티즌들 간 공방이 한동안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참여정부가 5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선자 신분으로 해결해줘' '그저 책임 떠넘기기'에 열 올리는 한편과 지지자들, 제발 생각 좀 바꾸기' 등등 발언이 쏟아졌다.

사건의 발단이나 전개 과정이야 어찌됐건, 이번 사건은 지지체간 이기주의와 탁상행정이 기업활동에 얼마나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의미있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전봇대'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불산단 외에도 광주·전남지역내 산단을 둘러보면 그 '전봇대'보다 더 심각한 장애물들이 숨하게 널려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수시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하남산단의 진출입로가 그러하고, 입주업체들의 생산설비 투자를 방해하는 농공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규정이 또 그러하다.

특히 외국인 전용산단과 관련, 산업자원부가 입주기업의 건전화와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해놓은 외국인 투자비중 규정은 대표적인 '전봇대'로 꼽힌다.

입주업체들이 자금을 하려면 1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비중도 비례해 늘려야 하는 이 규정은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물론 입주업체들의 타지역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

회사 창업과정의 복잡한 절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 아닐 수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회사법인 설립에 48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미국 5가지, 캐나다 7가지에 비해 적어도 9배가 더 많다.

창업절차도 발기인 구성부터 공증, 채권매입, 등기신청, 설립신고까지 16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13단계지만 6단계 이후는 보고만 하면 된다.

2년전 농산물 가공회사를 설립했던 함평군 B사 대표는 "서류작성에 필요한 등록세 등 각종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들어간데다 적은 도장만 100여 회를 넘겼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경련과 손잡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개혁작업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전봇대'만 뽑아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면 된다.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부터 걸러치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jtlee@kwangju.co.kr

김영진 前 농림장관 광주 西乙 표발같이

4·9 총선 현장

○17대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29일 광주 서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발같이를 본격화.

4선 의원(13, 14, 15, 16대)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활약했던 김 전 장관은 "의원과 장관직을 지내면서 구축한 경력과, 검증된 경륜을 광주와 서구 발전을 위해 쏟아부으겠다"고 출마의지를 피력.

강운태씨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강운태 전 장관이 남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29일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 준영빌딩에서 선거 사무 개소식과 지인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

강 전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정치권에 실망한 지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고, 남구와 광주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총선을 전후해 무소속과 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제3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강력한 미래형 통합정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임내현 前 광주교감장 복을 출마 선언

○임내현 전 광주교감장은 29일 "전국적으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복을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표발같이에 돌입.

지난 1974년 서울대 서울법대 3학년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찰 내 요직을 두루 역임한 임 전 교감장은 "당면한 청년 실업·인구 노령화·사회 양극화·교육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비전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

송두영씨 복귀 '민심 대장정' 눈길

○송두영 광주 북갑 예비후보가 복귀 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과 청소를 돕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민심 위기에 나서 관심.

한국일보 기자출신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때 신당 부대변인을 맡았던 송 예비후보는 "손학규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펼친 민심 대장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왔다"며 "앞으로 복귀 '민심 대장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겠다"고 강조.

임현모 총장 '공교육 정상화' 복갑 출마

○임현모 광주교육대 총장은 29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복갑 지역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

임 총장은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겨냥해 불속당에 들어오는 것은 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선 패배 이후 누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며 현직 국회의원과 일부 노무현 정부 참여 인사들을 성토.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당이 4·9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자격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등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비리 정치인 공천 배제' 갈등

공심위, 추측 "엄격 적용" 추측 "유연하게" 결론 못내

18대 총선의 공천 신청 자격기준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논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25 재보선' 참패 후 당 쇠신을 위해 개정된 당규 중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자, 파렴치범죄 전력자, 비리 관련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조항들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좌장격인 김부성 최고위원과 김태환 의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 김덕룡, 박계동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 각종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되거나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당내 양대 계파인 친이(親李)·친박(親朴)계의 주요 인사들이어서 당 지도부도 해당 당규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열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국민정서를 고려해 조항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복권됐거나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입성

한나라당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재오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단독출마한 5선의 정몽준 의원을 선출했다.

정 의원은 전국위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의 주대 형식으로 최고위원에 선임됐다. /연합뉴스

교육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아직도 바쁜 겨울으로 난방을 확실하게!

한라진택공시협약제품

010-9469-9373 (062)673-4981

로얄캐리어

새해맞이 특가 SALE

특별기획상품행사

관망실 30%~최고 50%

로얄캐리어